

이덕일의 '역사의 창'



코로나와 역병

과거에는 전염병을 역병(疫癘)이라고 했다. 역질(疫疾)·온역(溫疫) 또는 역병(疫癘)이라고도 했다. '염병할 놈'이라는 욕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알거나 무서워했는지 잘 말해 준다. '염병에 팜 못 낼 놈'이라는 말도 있다. 장티푸스 같은 열병에 팜을 못 내면 더욱 괴로워하다가 죽는 데서 나오는 속담이다. 우리 역사 기록에 역질에 대한 기사는 일찍부터 나타난다. 2천여 년 전인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 4년(서기전 15)조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전염병에 관한 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신라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9년(서기 22)조에 "큰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국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삼국사기' 등에는 의학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984년 간행된 가장 오래된 의서인 '의심방'(醫心方)을 보면, 백제에는 '백제신집방'(百濟新集方), 신라에는 '신라법사

방'(新羅法師方)이라는 의학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나라에서 간행된 '외대비요방'(外臺秘要方)이라는 의학서는 고구려에도 '고려노사방'(高麗老師方)이라는 의학서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방(方)이란 처방이나 약방문(藥方文)을 뜻한다. 이런 의서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제공했다. 그중 '신라법사방'에는 '복약주문'(服藥呪文)이 있는데, 약을 복용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귀신의 작용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민간 처방이 유행했다. 중국의 '진서(晉書)' '예지(禮志)'에는 정월 초하룻날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를 꽂아 놓으면 한해 동안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설날 그믐날 밤에 벽은단(辟瘟丹)을 술에 타서 마시면 이듬해 한해 동안 온역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전염병이 가장 위험할 때는 기근과 전

쟁이 함께 걸릴 때이다. 임진왜란이 한창 때인 선조 27년(1594) 최립(崔立, 1539-1612)이 쓴 '외적의 상황을 전한 주문'(奏職南)에는 "기근과 역병이 잇따라 발생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어 씨가 마를 지경이었다"는 구절까지 있을 정도다.

역질이 돌면 우리 선조들은 촌사(村舍)로 나가서 외부와 접촉을 피하면서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갑일 이현일이 쓴 '선교랑(宣敎郎) 노형필(盧亨弼) 행장'에 의하면, 노형필이 부친상을 당했던 인조 21년(1643) 전염병이 돌았다. 그는 부친의 영위(靈位, 신주)를 받들고 촌사로 나가 피해 있으면서도 조석으로 전(奠, 술과 과일을 차리는 것)을 올리면서 곡을 그만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다. 그러나 끝내 무사하자 효성 때문에 하늘에서 돌아 준 것이라고 벽은단(辟瘟丹)을 술에 타서 마시면 이듬해 한해 동안 온역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다산 정약용이 행정제도에 대해서 쓴 '경세유표'(經世遺表)에 '역역지장'(力役之征)이란 조항이 있다. 국가에 노동

력을 제공하는 세금인 역역(力役)에 관한 내용이다. 그중에 "흉(凶)과 잘(札)이 있는 해에는 역정이 없다"는 구절이 있는데, 당나라 가공인(賈公彥)은 그 주석에서 "흉은 그해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이고, 잘은 천하에 역병(疫癘)이 유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곡식이 익지 않았거나 역병이 유행한 해에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장아도 좋지 않던 경제가 코로나 19까지 덮쳐 최악의 상황이 됐다. 조선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었을 것임은 물론 내년엔 나라 살림을 줄여 세금도 대폭 감면했을 것이다.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조정은 활인서(活人署)를 설치해 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매일 죽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활인서까지 나와 죽을 먹기 힘든 양반가 부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죽을 제공했다고 한다. 복자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쳐낸 행정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의료칼럼

나이별 허리 통증의 원인



왕희신 광주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원장

장시간 있다 보니, 축만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성장이 끝난 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척추 축만증은 조기 진단으로 틀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세대에 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 원인으로는 '후관절 증후군'이 있다. 생소한 병명일 수 있으나, 허리 통증 환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후관절이란 등한가운데에서 척추를 받치고 있는 척추 뼈들을 연결하는 작은 관절로, 척추 사이 디스크처럼 허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며 허리 뒤에서 지지대 역할을 한다. 보통은 가벼운 증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디스크 증상처럼 심각할 수도 있다. 증상이 발생하고 초기에 허리 통증의 호전이 없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젊은 연령의 또 다른 허리 통증 원인으로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가 있으며, 이는 신경을 누르지 않고 염증을 일으켜 요통을 만들기도 하지만 탈출이 심한 경우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하지 방사통을 수반해 된다. 추간판이 퇴행 상태에서 디스크에 외상이나 과부하가 순간적으로 짧게 가해질 경우 허리에 새롭게 통증을 유발하거나 가벼웠던 통증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 경미한 디스크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저절로 흡수돼 1~3개월 안에 호전될 수도 있다.

고령 환자의 허리 통증을 빈번하게 발생하며, 원인 또한 다양하다. 그중에 가장 증상이 심하고 후유증이 큰 것이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 골절'이다. 대체로 60~70대 고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허리가 굽어지는 척추 후만증으로 진행돼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므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로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척추 협착증(척추관 협착증)은 노화와 과사용으로 발생한다.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뼈와 인대들은 비후돼 커지게 된다. 이렇게 뼈와 인대들이 비후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고,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과도하게 좁아지면 신경이 눌러 다리, 엉덩이,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질환이 척추 협착증이다.

척추 협착증 환자들은 주로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구부릴 때는

통증이 완화돼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허리를 펴게 되면 척추관을 지나가는 공간이 30% 이상 더 좁아져 신경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심한 척추 협착증이 오래된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는 앞으로 굽고 무릎은 완전히 펴지지 않고 굽어 있는 모습으로 지팡이로 지탱하며 걷게 돼 소위 '고부랑 할머니'라고 불리게 된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발생하는 초기에 약물 치료, 신경 주사, 물리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통증이 경감되며, 그 덕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 허리가 굽는 증상을 최대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허리 통증을 연령별로 여러 원인이 있다. 요통이 중·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만성화로 인해 삶의 질적 하락, 우울감, 자살감 하락,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근·골격계 위축 및 악화, 골다공증 등이 발생한다. 이후 회복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초기에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허리 통증도 혈압, 당뇨처럼 꾸준한 관리를 해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코로나 여전해도 투표율 최대한 끌어올려야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의 맹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투표율 역시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어제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확정 선거인 수 17만여 명 가운데 8만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선관위가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 투표 신고가 지난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총선 참여가 어려워졌다. 선관위는 생활치료센터 등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러 지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 이동 제한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소에 대한 방역 관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투표소에 체온계,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 용구 등을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다. 또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는 모두 입구에서 일대일 발열 검사를 받는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요즘은 건강한 일반인들도 감염을 우려해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투표소와 투표 용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투표대기자 간 거리 두기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일 것이다.

해외 입국자 행정명령 불이행 다시는 없도록

정부는 어제부터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한국·중국·미국 등 총 73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시킨 '폐쇄'적인 일본과 달리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83명의 감염원을 분석한 결과 35.0%가 해외에 머물다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3일간 의무적으로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의 경우 어제 추가 발생한 확진자 네 명 모두 영국발 입국자(3명)이거나 해외여행자의 접촉자

(1명)로 나타났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들은 광주시의 선제적인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과 동시에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제 KTX편으로 광주에 온 해외 입국자 13명중 10명이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누가 봐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편의를 먼저 앞세우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시·전남도는 격리 지침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도민은 물론 해외 입국자 또한 엄중한 협력을 감안해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86년 11월 18일 우리나라 한 유력신문은 '김일성 피격 사망' 소식을 1면에 전했다. 떠도는 소문을 검증 없이 쓴 것이다. 하루 뒤인 19일자의 1면 제목은 '김일성은 살아 있었다'였다. 비교적 최근인 2003년 4월 4일 오전에는 주요 방송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 피살'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CNN을 가장한 허위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인용한 오보였다.

언론사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검증해 팩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가 굴복할 만큼 거짓이 우려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느 정도 검증 시스템을 갖춘 언론사들이 실수나 검증 오류 등으로 오보를 내는 반면, 사이버 세계에서는 '의도'를 갖고 거짓을 양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익명 보장과 추적 불가능 시스템을 자신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털사이트나 SNS 운영 주체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거짓들을 차단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클릭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때문이다.

최근 10~20대가 주도한 'n번방' 사건을 보면서 그들을 괴물로 키워 낸 온라인의 익명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거짓과 가짜의 유통을 용인·방조하는 포털사이트나 SNS에 대해 보다 철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온라인에서 신분 위장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남에게 욕설을 던지며, 악역을 잡아 협박하는 행위가 이처럼 쉽게 이뤄지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듯하니 말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팩트 실종

팩트 실종이라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무이며 이 과정을 흔히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이라고 한다. 현장 기자·부장·편집국장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기거나 삭제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은 역시 팩트 여부다. 개개인이 발산하는 온갖 정보가 온라인과 SNS를 뒤덮으면서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들이 쏟아 내는 거짓에 우리나라 영향력 1위의 언론인마저 속았을 정도이니 아찔하다. 팩트 검증은

기고

총선, 축제로 승화되길

보들도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후보 확정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용을 겪었다. 여당의 경우 다소 높은 지지율에 공천이 곧 본선 당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과 재심 청구도 경선을 다시 하는가 하면, 공천 결과에 대한 고소·고발·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졌다. 그야말로 이전투구(이전투구) 양상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듯 보인다.

제1 야당 역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낙천된 후보들은 '막장 공천' '사천(私薦) 등을 주장하며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와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공천 후유증에서는 여야가 대동소이한 모습이다.

우리 지역에서 아쉬운 대목은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서 중랑감이나 잠심환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경우 여성 후보 비율이 전국적으로 17% 정도라고 하는데 광주·전남 18개 지역구에서는 겨우

한 곳에 그쳐 매우 미흡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인 주승용 의원이 '나이가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그나마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작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눠어졌던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보다는 어쩌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이슈라고 하는데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 든다. 여당에서는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국립대 반값 등록금과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등을 내세웠다. 유력 야당들은 군인 정년 연장과 복지, 그리고 20세 이상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이렇다 할 공약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영국의 처칠은 '정치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정치 지도자의 수준과 정비례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최근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총선 전에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한 번쯤 관

람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18~20대에서 58%, 54%, 46.1%로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유권자의 절반가량만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최선이 아닐지라도 차선 또는 차악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선거이다. 이처럼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고 기권한 데 대해 책임과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흔히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은 당의 공천과 함께 인물과 바람이라고들 한다. 민심은 늘 예측 불가능하고 아직도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후보들자는 지금의 초심을 잊지 말고, 호남의 민심은 늘 전략적인 선택으로 발전과 균형을 함께 이룬 위대한 유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곡(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